

대전광역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¹⁾

이 광 원 경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통합조직 신설의 필요성

현재 대한민국은 초저출산(합계출산율: 0.72) 및 수도권 인구집중 심화로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됨

대전광역시 역시 2019년 이후 지속적 인구 순유출과 청년층 감소세가 두드러지며, 지역 활력 저하 우려가 증대되고 있음

- 대전광역시의 인구·청년·외국인 관련 정책은 기획조정실·행정자치국·교육정책국 등으로 분산되어 정책 연계성 부족 및 예산 비효율성 발생 우려가 높음

대전광역시는 2023년을 '인구정책 원년'으로 선포하고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5개년 계획(2023~2027)」을 수립했으나, 이를 실효적으로 추진할 통합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실정임

광역자치단체별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통합 조직 현황

2025년 10월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여부와 인구·외국인·청년·다문화 정책 관련 통합 여부를 확인

표 1.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대응 통합 조직 설치 현황

시도	주요 전담 조직	통합 여부	업무 유형			
			인구 정책	외국인 정책	청년 정책	다문화 정책
서울	글로벌도시정책관			√		√
	정책기획관(인구시정연구팀)		√			
부산	인구정책담당관	0	√	√		√
대구	청년여성교육국				√	√
	경제국(고용노동정책과)			√		
인천	여성가족국		√		√	
	국제협력국(다문화사회과)					√
광주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			
	여성가족국					√
	교육청년국				√	
대전	교육정책전략국				√	√
	기획조정실(국제통상담당관)			√		
	행정자치국(균형발전과)		√			
울산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	√		
	복지보훈여성국(여성가족청소년과)			√		
세종	기업투자국(대학협력과)				√	
	보건복지국(인구여성가족과)		√	√		√
	기획조정실(청년정책담당관)				√	

경기	이민사회국	0	√		√	√
	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획과)			√		
강원	기획조정실(지역소멸대응정책과)	0	√	√		
	복지보건국(여성청소년가족과)					√
	경제국(일자리청년과)				√	
충북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
충남	인구전략국(외국인정책과)			√		√
	대외국제소통국(외국인국제정책과)					√
전북	기획조정실(인구청년정책과)		√		√	
	복지여성보건국(여성가족과)			√		
전남	인구청년미만국	0	√	√	√	√
경북	지방시대정책국	0	√	√	√	√
	인구정책담당관		√			
경남	복지여성국(보육정책과)			√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	√		

출처: 17개 광역자치단체별 조직도를 참조하여 재구성(2025/10/14. 기준)

통합조직의 유형별 주요 특징

완전 통합형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 형태로, 인구정책·청년정책·이민정책·다문화정책 등을 하나의 조직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이며, 정책 간 기능을 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인구감소, 청년 유출, 외국인 정착 등 상호 연관된 인구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함
 부분 통합형(인구+청년 등 2개 이상 통합 업무)은 청년 유입 및 인구 활력 중심형이라고 할 수 있음

가능 분화형은 인구·청년·외국인·다문화 정책을 개별 조직에서 각각 수행하되 특정 업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통합 운영한 형태를 의미함

표 2.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통합조직의 유형별 주요 특징

통합 유형	주요 특징	대표 지역
① 완전 통합형 (인구+외국인+청년+다문화)	지방소멸 대응 중심의 거버넌스형	전남, 경북
② 부분 통합형 (인구+청년 등 2개 이상 통합 업무)	청년유입·인구활력 중심형	부산, 충북, 세종, 경남, 강원
③ 가능 분화형 (인구·청년·외국인 각각 개별)	대도시형 전문기능 분화 구조	서울, 대전, 광주, 울산, 인천

1) 이 글은 2025년 수행한 기본연구과제 『대전광역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 및 외국인 정책 전담조직 신설에 관한 기초연구』에 근거함

통합조직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

대전광역시가 인구·청년·외국인 정책을 통합하는 새로운 행정조직(예: 인구청년외국인정책관 또는 인구청년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 결정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야 함

표 3. 통합조직 신설 시 고려해야 할 법적 근거

법령	핵심 내용	적용 방식
지방자치법 제125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	조직 신설의 근본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사·도의 기구설치기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 시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고려	신설 시 '조례 개정' 필수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5조 등	실·국 명칭, 소관사무, 정원범위를 조례로 명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세부 분장사무 명시	통합조직의 세부업무 조정 시 필수 근거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통합 조직의 단위는 “정책관(官)” 형태로 신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표 4. 실국·정책관의 법적 위상과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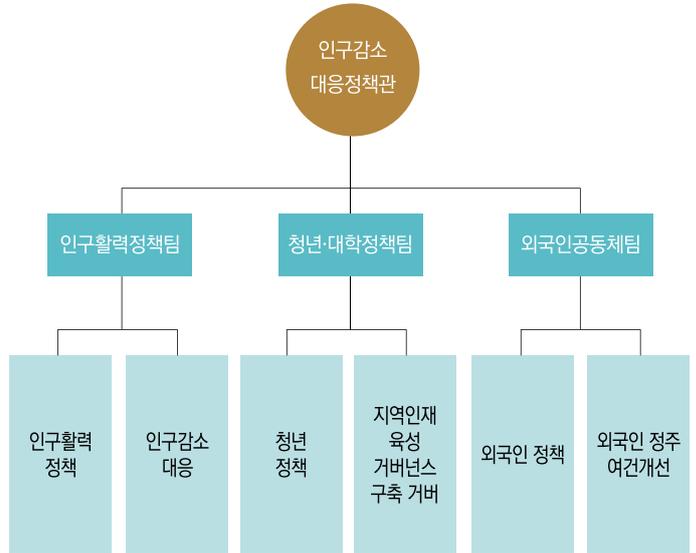
구분	실(室)	국(局)	관(官)
법적 위상	시장 직속 최고조직 (기획조정 중심)	본청 주요정책분야 담당(상설행정조직)	특정 정책분야 담당, 기획·조정 중심
설치 근거	지방자치법 + 대통령령 + 조례	지방자치법 + 대통령령 + 조례	지방자치법 + 조례 (대통령령 적용은 유연함)
설치 속도	느림 (정원 조정·중앙협의 필요)	가장 느림 (정원·예산 승인 필수)	빠름 (조례개정만으로 가능)
인력 규모	40~70명 이상	30~60명 수준	10~20명 내외
주요 기능	전 시정 기획·총괄	집행 중심, 단위정책 실행	조정 중심, 통합정책 기획 및 협력

대전광역시 통합조직(안)

통합조직은 기획조정실 아래 두며, 그 명칭은 ‘인구감소대응정책관’으로 하며, 인구감소대응정책관은 ① 인구활력정책팀, ② 청년·대학정책팀, ③ 외국인공동체팀의 세 개 실무팀으로 구성

- 대전광역시 통합조직 구성은 대전광역시의 인구정책 5대 전략과 타 시도의 통합형 조직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통합 조직 모델안을 제안하였음

그림1. 대전광역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통합조직(안)



구분	인력(명)	주요 업무(세부내용 포함)
정책관 (총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청년·외국인 정책 종합 조정 및 부서 간 협력체계 운영 중앙부처(행안부·교육부·법무부·여가부 등) 협력 및 국비사업 대응 인구감소 대응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점검 통합성과관리 및 인구영향평가 제도화 추진
인구 활력 정책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감소 대응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저출산·고령화 시행계획 수립 및 시책 발굴 인구감소 대응 전략의 통합 조정 관계 실국 및 자치구 협력체계 구축 인구정책 통합평가 지표 개발 및 관리 정부합동평가, 정책성과 관리 및 환류
청년·대학 정책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청년정책 관련 조례 제정 및 제도 개선 청년 일자리·정주·참여 관련 실국 간 정책조정 지역인재 육성, 대학생 정착유도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청년정책 모니터링 및 정책평가 지표 관리
외국인 공동체팀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다문화 정책 기본계획 수립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법무부·행안부 협력 체류 외국인(유학생 포함) 실태조사 및 정주여건 개선 정책 연구 국제협력 및 중앙정부 외국인정책 대응 대전형 비자제도 신설 및 제도개선 방안 다문화 정책 관련 법령·제도 개선 외국인 정책 관련 협의체 운영